

특별기고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한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남권역에서는 그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기까지 넘어야 할 의료의 벽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현재 전남권역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9곳이 ‘분만취약지역’이다.

권역 내 산부인과 중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2곳, 외대 진료만 가능한 곳도 61곳에 불과하다. 12개 지역은 분만실이 한 곳도 없고,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순천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다. 곡성·영암·장성·신안 등지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서 지역과 광범위한 농어촌 산간 지역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긴박한 속에서 늘 불안과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의료기관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긴급 상황 시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다. 진통이나 출혈 등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모와 가장

119가 지키는 산모와 아이의 골든타임

먼저 마주하는 이들은 바로 119구급대원이며, 때로는 구급차 내부가 긴급한 분만실이 되기도 한다.

새롭게 출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부는 이러한 오랜 지역적 숙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광역화된 행정과 소방 역량을 바탕으로 분만취약 지역 산모와 아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0월부터 두 달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순천(순천여성이동병원, 순천미즈여성아동병원)과 목포(목포미즈아이병원)의 전문 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삼아 펼쳐진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실 간호사, 구급전문교육사가 직접 참여해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이끈다.

특히 자동분만 마네킹과 신생아 마네킹을 활용해 구급차 내 분만 상황을 재현하고, 신생아 응급처치를 반복 훈련함으로써 긴박한 현장에서도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달리는 구급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진동 속에서도, 대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만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몸이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지역적 한계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병원 밖 현장에서부터 완벽한 응급의료로 시작되도록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 전문 의료진의 임상경험에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더하여, 병원 전 단계부터 분만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아울러 사전에 임신부의 상태와 병력, 다니는 병원 등

임신관련 정보를 등록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119안심콜 임신부 서비스’도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향하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이 위급한 순간 어디에 있는 필요한 소방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을 지키는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특별시의 가치다.

물론 119가 전문 산부인과나 분만의료기관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지역 분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가 함께 풀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그렇지만, 분만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생명 안전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 산모가 불안한 속에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리고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이 안전하게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 소방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하게 안전한 권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의 모든 대원은 이 단단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달리겠다. 신속한 출동과 전문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따뜻한 케어로 분만취약지역 산모와 아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새 생명의 탄생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축하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다. 119가 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골든타임을 굳건히 지켜내겠다.

기고

‘전남기록원’ 장흥전립 로드맵 즉각 제시돼야

윤명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기록은 지역의 역사이자 정체성이며, 미래 세대에 전달되는 중요자산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중요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수년간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행정 역사와 도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전남기록원’ 건립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도지사 주재 전략회의, 내부 결재, 여러 후보자 검증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5년 6월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의 ‘옛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폐교 부지를 최종 건립지로 공식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 부지는 2005년 대학 폐교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어 지역민에게 흉물이자 오랜 명예로 남겨진 도유지였다. 이곳에 전남도가 역사적인 전남기록원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표했기에 지역민은 더욱더 큰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전남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

역비’ 5000만원을 의회 승인을 거쳐 편성했고, 필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여태껏 통합특별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 없음,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채 전남기록원 모든 업무를 직무유기시키고 표류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 실태는 이번 2026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낱알이 드러났다. 당초 ‘전남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회계연도가 4분기로 접어든 현재까지 집행액은 0원이었다.

예산을 의결해 준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의 관능을 무시한 채 단 1원도 쓰지 않고 주머니 속 찜찜처럼 틀어쥔 채 여태껏 낯잠만 잔 것이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사태에 대해 특별시는 뒤늦게 “행정통합으로 인해 광주권 기록물까지 포괄해야 하므로 수용 규모와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만약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면 9개월째 표류하지 않고 당연히 이번 추경에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용역비 증액을 당연히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태껏 본예산 5000만원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하세월하고, 이번 추경안에서는 관련 예산 조정 자체를 통째로 누락시켰다. 사업을 추진할 의지도, 예산을 반납할 결단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며 사업을 자연 고사시키려는 비겁한 썩수다.

장흥군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도 예산을 마련하고, 기존 로드맵에 따라 계획대

로 착실히 토지 관리계획 변경 등을 이행해 오고 있다.

수년간 막대한 형세와 행정력을 쏟아 후보지를 검토·확정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온 이 모든 공식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는 또 무엇이며, 이번 사태로 갈갈이 찢긴 지역민들의 신뢰는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통합의 깃발 아래 농어촌 외곽 지역의 확정된 숙원 사업부터 멈춰 세운다면 통합특별시가 출발선에서부터 균형발전을 내뽐게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공허한 말장난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통합특별시는 당장 방치된 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즉각 발주하고 장흥 부지를 거점으로 광주권 수요를 포괄하는 통합형 기록원 건립 로드맵을 연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일방적 희생과 약속 파기 위에 세워진 통합은 모래성일 뿐이다. 전남도가 공식 절차를 거쳐 확정 공표까지 마친 전남기록원 부지를 행정통합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백지화하려 든다면, 대체 어느 지역민이 특별시의 미래를 신뢰하겠는가.

지역민의 정당한 기대를 짓밟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약속된 장흥 땅에서 전남광주기록원이 첫삽을 온전히 뜨는 그날까지 3만4000여 장흥군민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을 대변해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사설

현장중심 기업 규제완화 “투자로 이어져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눈에 띈다. 여기에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호남반도체 팹 조성 등 전남광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지정 과정에 신속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추진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산단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줄이고 76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이끌어내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국가산단 최종 지정까지는 ‘하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개발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가 따로 따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일췌였다. 통상 착공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최대한 통합하고 동시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연 최소화를 위해 부처간 이견까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협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신재생에너지, 첨단제조·물류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인 무안 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또 호남반도체 팹 공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반도체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분리 발주했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종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예외를 제기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대상기준을 기존 발전사업 계획면적 7500㎡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풀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향후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전남지역 고령화 심각…대책마련 서두를 때

전남지역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다 2052년에는 전체의 절반을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공개한 ‘2026 고령자 통계’에는 전남지역의 고령화 현실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령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였고 고령자 가구(가구주 65세 이상)는 650만7000가구로 전 가구의 28.8%나 됐다.

전남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7.0%p를 웃돈 28.6%(49만8000명)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반면 광주지역은 19.1%(27만 4000명)로 전국 평균보다 2.5%p 낮았다. 전남과 광주가 같은 생활권으로 묶였지만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남지역 고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전남 고령화 비중이 2028년 30.6%로 30%를 넘어선 뒤 2038년 40.8%, 2052년 4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역시 고령인구 비중이 2028년 20.9%, 2038년 30.4%, 2052년 38.8%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의료와 돌봄, 노후 소득과 맞물려 거대한 노후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고령층은 만성질환 관리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37만 6000원인데 이 중 본인 부담비는 125만6000원이나 됐다. 또 2024년 연금 수급률이 91.2%였지만, 연금 수령액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월평균 73만7000원에 그쳐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나 됐다.

이에 따라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엔 농어촌형 돌봄, 광주엔 도시형 복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취재수첩

소아청소년과 축소 심각…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이산하

정치부 차장



필수의료 중 하나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가 축소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고된 일에도 의료소송이나 보호자의 악성·허위 민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충은 전공의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끼친

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13명에 불과할 정도다.

이마저도 서울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89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손에 꼽힌다.

지역의 경우 광주는 3명, 전남은 3명에 그친다.

신규 전공의의 수급 역시 얼어붙었다. 지난해 수련병원별 소아청소년과 1년차 모집 결과 전국 61개 수련병원 중 85.0%에 달하는 52개 병원이 단 1명도 충원하지 못한 충원율 0%를 기록했다. 1년차를 확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10명), 서울대병원(8명), 삼성서울병원(2명)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국한됐다.

전공의 부족은 전문의의 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6000명을 넘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둔화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명이 감소, 은퇴하는 전문의 수만큼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아인과와 소아마취과의 경우 지난 3~4년간 신규 펠로우 지원자가 전국에 단 1명도 없는 전멸 상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직면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의사 부재에도 정부에서는 환자 수용만을 강제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가 인상 정책도 인력 유입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사명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형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서울지사 ☎978-7090			